

민주 “윤상현, 폭동 선동” vs 국힘 “경찰 대응 허술”

법사위 ‘서울 서부지법 폭력사태’ 질의...재발 방지 촉구 한목소리 국힘 “준비 철저히 했어야”...민주 “정치인, 책임감 갖고 발언해야”

20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이날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의 선동정치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의원 박규택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서부지법은 대외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이와 같은 난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평

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도 “법원에서 선언된 것(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며 여권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정래 법사위원장은 “오늘은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폭도들에 의해 침탈된 것을 규탄하고, 그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라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상목 대행, 내란특검법 ‘고심’

민주당안, 국힘 요구안 전폭 수용에도 합의 결렬...국힘, 거부권 요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논란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 의도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하다. 다만, 당장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

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21일 국무회의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데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와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권은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한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상정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태에도...정권 연장 vs 교체 ‘팽팽’

리얼미터 조사...국힘 지지율 46.5%·민주 39%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을 꺼안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특히 ‘뒤통’인 호남에서조차 한 달 넘게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정권 교체의 ‘기회’가 ‘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예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6.5%로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7%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전주 조사 대비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도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27.4%, 민주당이 54.6%를 기록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도는 리얼미터의 한 달간 같은 내용의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민주당의 호남 지지도는 한 달 동안의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을 선택했던 중도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힘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p 상승했다.

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부터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유리한 지지 입지에 있었음에도,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경쟁에서 오히려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정권 교체’, ‘대통령 탄핵’ 등을 말로만 주장하면서, 내란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우선(97%)·우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법원 습격범 100여명 중 46명만 검거

전원 구속 수사 방침·헌법기관 경계 강화...경찰 부상 51명으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 내부로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에 가담했지만, 절반도 안 되는 46명만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3시에 100여명의 시위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 가운데 43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보고

했다. 이어 오전 4시 20분께 시위대 20여명이 법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경내 안으로 가져와 바리케이드로 활용했다. 이들은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이들 가운데 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3시에 법원 주변엔 1300여명이 모여 있었다.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 400명이었다.

이중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고, 법원 뒷쪽 등에서 유리병, 돌, 의자 등을 던지면서 월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상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경찰관 폭행, 월담 행위자 등은 범죄성립 여부 및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법원·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영상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